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남주



지난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중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확산돼 왔다. 올해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의장 성명과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연이어 찬성했다. 북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5월 29일자 외부성 대변인 성명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미국과 그에 아무,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있다"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북·중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지난 9월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원자바오의 방문은 최근 양국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붕괴했다. 다음 두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첫째는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원자바오와 과격적으로 마중을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른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보기 힘든 열정적인 포옹을 한 장면이다. 둘째는 원자바오가 수행 인원, 평양에 주재하는 중국인들과 함께 이동에만 두 시간이 걸리는 '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

전 중 사망한 중국인들의 공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원자바오의 평양 방문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국은 중국 투자로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할 것과 그 밖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유엔의 제재결의를 지킬 것을 공언하고 있지만, 제재를 북한에 대한 고압을 강화시켜 핵 포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삼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북·중 관계가 이처럼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첫째, 북·중 관계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관계로 보는 오해이다. 객관적인 힘을 비교하면 이러한 오해가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힘의 열세에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1956년 이른바 '8

월 종파사건'에서 소련과는 물론이고 중국의 연안과를 모두 쫓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이후에도 중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다.

둘째,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부담으로만 생각한다는 오해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 중국의 반응을 보면 이런 오해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환치우스바오(還求時報)는 6월3일 "조선은 중국 인민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朝鮮人民對朝鮮中韓民衆)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다. 그러나 감정을 감정하고 현실적 이익은 이익이다. 중국과 미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상대를 여전히 잠재적 경쟁자로 보

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우언라이(周恩來)가 1954년 제시한 영토 및 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공존 5원칙'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 원칙을 티베트와 신장 등의 분리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력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중 관계가 과거의 동지적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쉽게 단절되거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비핵화와 북·중 협력 관계의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두 목표가 충돌하며 중국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게 비핵화라는 목표는 북한의 핵개발 이후에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붕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과정에 진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전략적 이익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중국의 외교원칙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이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이 제재를 위한 제재에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화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공회대 중국학과·정치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北·中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시설

'숨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비리 키운다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의 부패상이 심각하다. 최근 지역 공무원이 잇따라 업무와 관련해 검은 돈을 챙기다 적발된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전남도의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전남도의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이 지난 10월 업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광주 모구청 6급 공무원 A씨도 업무로부터 300만원의 받았다가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 공무원들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자체 감찰 비리 사례를 모아놓은 자료만 보아도 공직사회에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과·오납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빼돌리는 가하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해 초과근무수당을

타내는 등 험세를 족했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급업을 하는 공무원, 공용차 기를 개인차에 사용한 공무원 등 온갖 수법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중(重)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가벼운 내부 징계만 하고 쉬쉬하며 덮어버리기 일쑤다. 검찰의 2005년 이후 지난 4년간 일반 형사범죄의 기소율은 48%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그 8분의 1수준인 약 6%에 머물렀다. '제 식구 감싸기'와 숨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범죄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청렴 없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선진국 진입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공무원 뇌물·횡령 범죄에 미치근한 처벌로 일관해서는 국가 청렴도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공무원 비리가 가득한 나라가 강대국(強大國)으로 올라선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다.

'소금 산업법' 명품 천일염 양산계기로

천일염 육성의 전기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소금 제조·가공 분야 지원을 위한 '소금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광물로 취급되던 소금이 식품으로 분류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그러나 기존의 염산법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금산업법은 식품으로서의 위생, 품질 관리나 산업적 육성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고품질 소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소금 명인' 제도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소금도 전통식품이나 전통술과 같이 시설통금이나 원료 구매자금,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7%가 전남에서 생산될 정도로 소금 산업 육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전남도는 현재 1천억원대인 천일염 시장 규모를 5년 내 1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천일염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아직도 전남산 천일염은 우수한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 생산자와 수요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유통경로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명품 천일염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그러나 천일염 생산 과정이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인력 수요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국산 소금의 국산 탄감도 소금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명품 천일염은 저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업자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無等鼓

상(賞)은 가끔 시비를 부른다. 수상자가 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춰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다. 상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평가기준이 애매할 때가 대부분이다. 정선전경이 치로 수상자를 뽑거나,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에 관한 수상 결정은 이 같은 논란을 빚기도 한다.

재미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거머쥔 브라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노벨위원회 측은 "앞으로 그가 할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9월 역대 논란을 불러온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 이 잡지는 논란 대상자로 엘리후 루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우르드 윌슨 전 미국 대통령, 레온 부르조아 국제연맹 전의장,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메니엘 베긴

이스라엘 전 총리,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등을 꼽았다.

잡지는 이전 수상자 가운데 논란의 대상 선정 이유로 ▲평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애매할 때가 대부분이다. 정선전경이 치로 수상자를 뽑거나,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에 관한 수상 결정은 이 같은 논란을 빚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면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결정이 그리 개운치는 않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확고한 상징성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오바마가 추진해온 지구촌의 비핵화나 이슬람 권과의 대화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다. 오바마의 대외정책 기조가 이전 부시 정권의 강경노선과는 달리 대화와 평화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바마의 행적을 살펴보면 노벨위원회의 설명처럼 '미래의 실적'을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노벨상 시비



※박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전 주연

자동차등록대수 1천700만대 시대.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불법주정차 문제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다수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하고 있다. 그런데 법규 위반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피해

리과정이나 세금납부 안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6·15일에 본격 가동이 되었다.

특히 9·1일부터는 주정차 단속시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차됐습니다. 5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서구 주민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 SMS로 알립니다

를 주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규정에 얽매어 단속에만 열을 올린다고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속 현장과 교통민원실은 운전자와 단속 요원들간의 마찰로 조용할 날이 없다.

운전자들이 제기해 온 가장 큰 불만은 '예고' 없는 단속이었다. 단속 직전 호루라기나 육성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나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크히 드물었다.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이를 개선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크게 줄였다.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로 통해 주정차 위반 사실을 미리 문자로 알려 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우리 구가 전국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다.

CRM은 주민들의 개인별 서비스 이력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민원처

리과정이나 세금납부 안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6·15일에 본격 가동이 되었다.

특히 9·1일부터는 주정차 단속시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차됐습니다. 5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서구 주민이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국가감자로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농산물 산지조직과 불공정 거래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그것도 지난 4월23일~6월 29일까지 66일 동안 소비자단체와 직접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 그 실태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들 업체들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고



김수공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 국가감자로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농산물 산지조직과 불공정 거래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0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그것도 지난 4월23일~6월 29일까지 66일 동안 소비자단체와 직접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 그 실태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들 업체들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어놓았다는 아예 거래중단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압박, PB(유통업체 자사브랜드)상품 납품강요, 대금결제지연, 사은행사 비용부담 전가, 저가납품 강요, 부당한 비용부담 중용 등 다양하다.

납품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다. 더욱 기본이 상하는 것은 경쟁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니,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유감

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기도 산지 농업인들을 울린 셈이다. 당연히 정부의 지도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하는 등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어쩌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소비자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오류일지도 모른다. 산지유통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지만 소비자 유통에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할 경우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할인 판매 형식을 빌어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구실을 낳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별 농업인은 없다. 이는 필자가 농업의 전남 농산물 산지유통을 총괄하는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장 시절에 경험적이다. 농업인은 유통업체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도 불평불만을 털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압박, PB(유통업체 자사브랜드)상품 납품강요, 대금결제지연, 사은행사 비용부담 전가, 저가납품 강요, 부당한 비용부담 중용 등 다양하다.

납품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다. 더욱 기본이 상하는 것은 경쟁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니,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별 농업인은 없다. 이는 필자가 농업의 전남 농산물 산지유통을 총괄하는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장 시절에 경험적이다. 농업인은 유통업체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도 불평불만을 털

어놓았다는 아예 거래중단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할인행사 강요, 거래중단 압박, PB(유통업체 자사브랜드)상품 납품강요, 대금결제지연, 사은행사 비용부담 전가, 저가납품 강요, 부당한 비용부담 중용 등 다양하다. 납품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다. 더욱 기본이 상하는 것은 경쟁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니,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장〉

찜질방 옷·수건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에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에서 주는 옷의 바지 주머니에서 누런 먼봉과 누른기가 짙은 발톱이었다. 누르나 불쾌하고 구역질이 나왔다. 다음번에 그 옷을 입을 사람 생각은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아울러 옷을 관리하는 찜질방도 문제였다. 이물질이 나와 불쾌할 게 뻔한데 옷 관리를 너무나 허술하게 했다. 특히 대형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찜질복과 수건은 대부분

흰색이 아닌 검정·분홍·회색 등의 색깔이어서 세탁을 했는지도 눈으로 분간하기 어렵다.

찜질복이나 수건이 흰색이라면 세탁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우니 당국에서 찜질복과 수건 등은 반드시 흰색으로만 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찜질복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윤용덕·광주시 서구 덕흥동

무심코 들고온 식당 젓가락... 알고보면 도둑질

며칠 전 베트남 쌀국수집 식당에 갔더니 젓가락이 우리가 흔히 쓰는 것과 좀 달랐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야자수를 깎아 만든 거라며 베트남 특색을 내기 위해 젓가락도 그걸 쓴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주부가 그 젓가락 한 쌍을 참어쁘다며 슬그머니 자기 가방에 넣어 넣는 게 아닌가. 자기와 같이 앉은 다른 아줌마들은 아예 "하나가지

고 되겠어? 두 개는 있어야지"라며 깔깔거리며 부추겼다.

남의 물건을 주인 물레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도둑질인데 사람들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며 누구도 그걸 나무라지 않고 본인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아이들이 배워서 우리 사회의 나쁜 독소로 자리잡아 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